韓電 原電사업 특감

감사원 이달중 적정성여부 不實시공 집중감사

감사원은 9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이달중 착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安秉華 前상공부장관의 원전사업관련 수뢰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원전건설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앞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실시 배경에 대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원전건설사업 자재품질의 적정성여부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부당하도급 등에 대해 집중감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원전 설계에 따라 시공된 것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거나 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로 시공되는 등 부실시공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설계대로 다시 시공토록 하고, 비위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원전 건설국소속 감사요원21명을 투입, 3주에 걸쳐 감사를 하고, 감사의 객관성 및 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 안전기술원, 건설기술연구원등 전문연구기관에 자문할 계획이다.

〈朱庸中기자〉

지역民放 오늘 발표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공보처회의실에서 지역민방허가위원회(위원장 吳隣煥 공보처장관)를 열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직할시의 지역민방사업자를 최종 확정발표한다. 업계에 따르면 채점기준과 청문결과를 종합해볼 때 부산지역에서는 H·J사, 대구는 C·D사, 광주는 L·D사, 대전은 J·S·W사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매인 도매행위 허용

밭떼기·수탁판매는 금지

農安法 재개정案

정부는 지난5월 농수산물 유통마비 사태를 초래했던 農安法을 재개정, 그동안 도매시장 중매인에게 도매행위를 금지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도매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농수산물 중간마진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산지 밭떼기와 수탁판매는 금지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유통개혁기획단(단장 李錫采 농림수산부차관)은 9일 이같은 「농수산물 유통혁신대책안」을 마련, 당정협의 등을 거쳐 농안법을 재개정,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8면〉

대책안은 농수산물 유통을 줄이려면 품목별 수산업체 중심의 규격출시, 밭떼기를 제도권으로 흡수, 양성화하고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품목에 상장거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承仁培기자〉

◇사하라에 PKO軍 파견 서부 사하라 지뢰지대(PKO)에 참여할 국군의료지원단 선발대 17명이 9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환송객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金振平기자〉

납북인사 송환 총력 촉구

국회外統委 결의

국회외무통일위(위원장 羅雄培)는 9일 납북억류인사송환과 북한내 인권개선과 관련,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高相文씨등 납북인사들이 당장 송환돼 가족과 재상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외무통일위는 이날 여·야합의로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高씨를 비롯한 납북인사의 생사확인과 원상회복을 위한 송환을 설사시키라』는 촉구했다.

외무통일위원들은 또 『북한당국은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사면위원회등 인권관련기관의 실태조사를 허용하고, 이산가족과 억류자송환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납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채택한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李鍾遠기자〉

양도세율 대폭 인하

「新경제」회의 40~60%서 30~50%로

정부는 연내에 소득세법 및 종합소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개정, 현재의 45%에서 40%로 낮출 방침이다. 또 토초세율도 현재 50% 단일세율에서 30~50%로 누진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 빠르면 96년부터 예금자보험제도가 도입돼 은행사고나 부도시 고객들이 예금의 일정액을 되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金泳三대통령 주재로 제12회 신경제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재무부 姜萬洙세제실장은 이날 올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인적공제한도와 근로소득공제한도를 각각 인상,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姜孝祥기자〉

UR비준 정기국회서 처리

民自 8월 처리 철회… 對野협상 착수

민자당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국회비준안 처리문제가 黨내 위임원에 따라 비준안의 8월처리 방침을 철회, 年內처리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12월18일까지의 정기국회 기간중, UR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것으로, 미국·일본 등의 처리과정과 야당의 반응 등을 보아가며 최종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자당내에서는 처리시기와 관련, 미국의 처리가 예상되는 10월 또는 12월초 예산안 처리와 동시에 재의지를 밝힌 대학은 연세대 서강대 건국대 한양대 뿐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대학과 교수들이 그간 운동권 학생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왔던 양태에 비추어 볼 때, 대학들의 이번 정치성 집회 불참의지가 실천력을 가지려면 앞으로 어떤 정치성 집회 불참 천명과 더불어 집회 강행에 대비한 학교측의 대응방안도 함께 발표됐어야 마땅하다는 지적들이다.

최근 고려대가 보인 「눈치 처신」이 대표적인 사유로 꼽히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권력 투입 요청 의지를 밝힌 30분 뒤 『엎친 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가, 또다시 30분뒤 『요청철회도 있다』고 번복하는 웃지 못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들중 한명은 『복경행 출발』이라고 쓰인 대회 팸플릿을 기자에게 보이며 『북경이란 게 어딥니까』라고 물어 「베이징」이라고 하자 그제야 알아들었다. 또 「판소리」 공연 때는 「판소리」라는 말의 뜻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랐으며 『이 노래는 좋은 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말도 안통하는군요…』라고 서운해하다 『지금부터 10년이 지나 남북간에 본단전 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나면 정말 남남이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라고 했다.

○…한국대표단은 당초 한국산 486 개인용 컴퓨터 3대를 북한측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북한측이 『우리는 93년에 김일성수령님께서 주신 1천만달러로 개인용컴퓨터를 다량 구입해 놔 필요가 없다』며 거절해 할 수 없이 연변 조선족 학술단체에 기증했다.

北학자, 정치범수용소 전형 몰라

高相文씨 납북감금 등고 답변안해 우리측 PC3대 전달에 北측 거절

연변 「컴퓨터 학술회의」 안팎

【延吉=金明煥기자】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연길시 연변호텔에서 열린 「94 코리안 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는 김일성사망이후 북한의 엘리트층이 가장 대규모로 남한측 인사들과 공식적으로 접촉한 자리였다. 학술행사이니만큼 이번 모임에서는 가급적 정치적 문제를 화제로 삼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비공식석상에서 기자는 북한측 젊은학자들과 열마간의 대화를 나눴다(자연스런 대화를 위해 기자는 굳이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남조선 대학생들이 분향소를 세웠다는 소식과 함께 이들을 경찰들이 짓밟겠다는 소식을 듣고는 많은 북한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북한 젊은학자들은 또 약속이나 한듯 『클린턴도 조의를 표했는데…』라고 일을 모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싸운 사람이 아니라 당신 어머니 아버지를 죽인 책임자라면 당신은 그래도 조문을 하고 대화하고 싶겠느냐』고 묻자 『그분이 신문사 사장이라지요?』라고 묻고는 『그 신문사가 폐간됐습니까』라고 되물어 잠시 기자를 어리둥절하게 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전에 대우그룹 회장도 조선에 다녀갔다』며 『대우하고 삼성하고 납북돼 억울하게 갇혀된 사실을 아느냐』고 하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하하…』 웃다가 다시 『정치범을 수용하는 평양교외 승호마을에 관해 아느냐…』고 하자 『승호마을?』이라고 되물으며 또 웃었다. 그는 기자가 『권위있는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저방큰 책임이 대학당국과 교수들의 「무관심」에 있었기에 각대학의 이같은 자세 변화는 일단 환영받을 만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지금껏 학생운동권의 좌의세력이 「암세포」처럼 번져온데 대한 가장 큰 책임이 대학당국과 교수들의 「무관심」에 있었기에 각대학의 이같은 자세 변화는 일단 환영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런 의지 표명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부대학의 경우 과연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한지 의심이 간다. 불허 입장과 함께 「법적인 조치」 「공권력 투입요청」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民培기자〉

北 흑연감속 원자로 러, 輕水爐교체 검토

【모스크바=聯】 러시아 원자력에너지부 핵전문가들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를 경수로로 교체하는 문제를 검토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러시아 원자력에너지부 핵전문가들이 北러시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협정」에 따라 군사용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흑연감속 원자로를 경수로로 교체하는 문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李부총리 국회외통위 답변

「가까운 시일내 對통일정책 발표」

金正日 권력승계 순조롭게 진행 남북정상회담 先제의 검토 안해

李昇九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9일 정부의 새 통일정책과 관련, 『가까운 시일내에 자주 평화 민주 등 통일에 대한 기본철학을 재정립,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李부총리는 이날 국회 외무통일위에 출석, 「현 정부의 對北정책 혼선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민자당 盧在鳳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하고 『우리 사회가 통일을 지향하면서 포기할 수 없는 기본가치와 규범및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법국민적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작성, 정기국회 기간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부총리는 또 北韓내부 동향과 관련, 『金正日이 여러가지 장기적인 건강상의 문제는 있으나 특별히 위험한 상태는 아니며 가족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권력배분과 조직 재정비, 권력구조 변동에 따른 인사개편 등의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공식적인 승계절차가 마무리되고 金正日의 권력기반이 확고하게 안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金正日을 중심으로 하되 실제로는 「集的 지배체제」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했다.

李부총리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北韓이 연기를 요청했던 만큼 북한이 연기를 해제시키는데 필요한 내부절차를 완료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先제의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회의에서 與野의원들은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부재를 지적하고, 납북자 송환과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李鍾遠·許容範기자〉

「이눈치 저눈치」

記者 수첩

온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연합 등 65개 재야단체가 주최하는 범민족대회를 앞두고 각대학이 정치성 학내집회의 불허 방침을 잇따라 천명하고 있다. 지난 1일 서강대와 건국대 경기대가 이같은 방침을 확인한데 이어 2일 경원대 아주대, 4일 고려대 서울시립대, 8일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9일 성균관대가 뒤를 따랐다. 범민족대회 개최시기가 다가오면서 개최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대학들의 이같은 의지 표명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10일로 예정된 서울지역 16개 대 학생처장들의 모임에서 범민족대회 대책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더욱 그렇다.

때늦은 느낌마저 있으나 일단 대학들이 정치성 집회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그러나 이런 의지 표명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부대학의 경우 과연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한지 의심이 간다. 불허 입장과 함께 「법적인 조치」 「공권력 투입요청」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崔秉默사회부기자〉

人事

◆외무부▲조약국장 吳潤卿▲문화협력국장 金永基▲감사관 崔京甫◆충남일보사장 이시눈설▲관리국장 崔命琪◆한국외국어대학교부처장 朴鍾黨▲서울캠퍼스총무부장 李康五▲용인캠퍼스학생처장 金世永▲동국대학원장 金經喆▲보건소장 徐廷旭▲서울항의료원장 李聖雨▲병원장 金璋顯▲경주소장 李永鉉▲전자계산소장 金石▲경주시간호대학장 沈翊燮▲실업전문대학장 趙洪基▲행정·교학부처장 李東雨▲자연과학대학장 李秉東▲공업경영·교학부처장 金錫龍▲산업기술·교학부처장 申宰浩▲여학생처장 李玉子▲경영관리대학원장 趙熙榮▲농림과학대학장 趙炳寶▲해외개발협력단장 李秉三▲학술정보원장 趙洪起▲체육부장 金普鉉▲국제학생처장 孫俊奎▲교육문제연구소장 金仁洙▲생명과학대학장 尹柱億▲일본학연구소장 申容置▲미래유스텔레비전 제작본부부주간 서리田麗玉▲신라문화원장 金甲周▲한의학대학원장 朴準鶴▲영남대학교 조경대학장 崔相範